

오늘과 내일



육정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

지난해 9월 13일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이 진해 해군기지를 출항하고 있었다. 근역대 연주소속해 감파 위에는 해군 장병 300여 명이 도열해 두 팔을 높이 흔들었다. 해군 특수전여단 수중 파괴대(UDT) 30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한주호 준위(53)였다. 해적 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떠나는 청해(淸海)부대 제1진이었다. 부두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정육근 해군참모총장, 장병들의 가족 등 1000여 명이 늘어 서서 박수로 무운(武運)을 빌었다.

그날 이 대통령은 태극기 마크가 선명한 검정 가죽점퍼에 군청색 해군 모자 차림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은 한 준위가 천안함 구조를 위해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던 그제와 같은 복장으로 구조현장을 방문했다.

국가의 부름에 늘 앞장선 참군인

한 준위는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자진해서 위험 현장을 찾는 군인이었다. 청해부대에서, 이번 구조현장에서 최고령 큰형님이었다. 천안함 구조에 나선 UDT 요원

은 지휘관(중령)을 포함한 전원이 그의 제자다. 20년간 교관으로 있으면서 그가 기른 특전대원은 2000여 명이다. 군이 그가 가지 않아도 될 자리였다. 후배들의 만류에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뿌리쳤다. 늘 그런 식이었다. 35년간 편히 지내기를 거부한 군인이었다.

청해부대 파병을 앞두고는 현지 상황에 맞는 장비와 훈련을 하느라 바빴다. 해적선에 오를 수 있는 특수 사다리를 선박 높이별로 만드는가 하면 평상시의 고정 표적이 아닌 이동 표적을 대상으로 사격훈련을 했다. 1983년 10월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때도 어김없이 구조현장에 있었다. UDT 요원들을 이끌고 시신 184구를 물밖으로 꺼내는 데 앞장섰다. 전체 시신 292구의 3분의 2를 그의 팀이 수습했다. 한 구 한 구를 인양할 때마다 자기 가족처럼 조심조심 다루던 것을 후배들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2년 후배로 33년간 한 준위와 함께 동고동락 한 김종훈 원사(51)는 "한 준위는 군복을 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늘 스포츠형 머리부터 군화까지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했다. 복장과 군기(軍紀)가 불량한 병사들을 보면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어디서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호되게 나무랐다. 누구도 깨지 못한 UDT 교관 20년 경력은 엄격한 그의 성품을 반영한다. 한 준위는 UDT 대원들의 빨간 모자를 유난히 사랑하며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었다.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했다. 후배를 따름하게 나무랄 때와는 사뭇달라 따로 불러 처

따라주며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라고 다독여 주는 자상한 형님이었다. 동료들의 고통사(苦痛事)에는 아이의 돌잔치까지 빠지는 일이 없었다. 후배들에게 늘 "가족과 친구, 친지들도 생각하면서 군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집에서는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 아버지였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같이한 뒤 귀가하면 부인과 한잔 더 하면서 '군인의 길'을 얘기했다. 한식 및 일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따서 아내의 요리를 거든 자상한 남편이었다.

죽어서도 군인이고 싶었던 영웅

그는 전역 2년여를 남겨두고 바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얼마나 해군이고 싶었으면 그렇게 갔을까. 서둘러 가면서 유언도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 천안함 침몰 다음 날 부인도 못 본 채 백령도로 황급히 떠난 뒤, 숨지기 전날 "바쁘니까 내일 전화할게"라고 한 것이 마지막이다. 아들 한상기 육군중위(25)도 같은 날 구조활동을 마친 아버지와 마지막 통화를 했다. "힘들고 좀 쉬라"고 하시기에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계속하겠다고 하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너무나 가슴 아프다. 안 해도 되는 일에 앞장선 군인정신을 높이 기려야 한다"는 애독자들의 전화가 쇄도했다. 남이 알아주진 않건 목숨까지 군인의 외길을 걸어온 고(故) 한주호 준위, 그는 진정한 호국의 영웅으로 길이 빛날 것이다.

社說

천안함 수습, 억측도 몰아붙이기도 도움 안 돼

천안함이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만 5일이 지났으나 46명의 실종 장병 구조작업은 아직 성과가 없다. 사고 원인도 여전히 짙은 안개속이다. 군이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이런저런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정치권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에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침몰 직후 군의 대응에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종자 구조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잠수요원들은 심해(深海) 잠수장비도 없이 최악의 조건에서 목숨을 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애국심과 살신성인의 정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도 비상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네 차례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고 현장과 백령도까지 찾았다.

천안함 사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침몰 원인을 철저히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원인을 예단하거나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대응 방안을 알기알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에 하나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그때 응징방안을 논의하면 된다. 우리 영해를 침범해 함정을 파괴하고 장병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다. 정부는 치밀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인 규명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함정을 건져 올려 조사를 마쳐려면 한 달 혹은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조사 결과와 수사 기록 등 외부 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북의 소행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북의 개입이 확인되더라도 의도적인 도발인지 아닌지도 따져야 한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실종자 구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원인 규명은 정부와 군을 믿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옳다. 억측이나 몰아붙이기는 구조작업에도 진상 규명에도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따지고 책임을 추궁해도 늦지 않다. 정치권이 전면에서 나서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작전 기밀을 노출하거나 영해 방위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 이 시간에도 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사기도 고려해야 한다.

대신 정부가 제대로 일처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나 궁금증이 없도록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창간 90년 동아일보, 항상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조선민중(民衆)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하노라.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는 3대 주지(主旨)를 밝히며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조선민중'은 식민지 현실에서 억압받는 우리 민족의 실체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창간가는 '본사의 전도(前途)가 심히 험하다. 오인(吾人)은 오직 민족의 친구로서 생사진퇴를 그로 더불어 한 가지 하기를 원하며 기(期)하노라'라는 결의로 맺었습니다. 민족지(民族紙)의 가시발길을 예견하면서도 그 길을 겨레와 함께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인촌 김성수를 필두로 창간 주역들이 약속하고 실천한 언론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편에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신문으로 새로운 10년, 100년을 열어가려 합니다.

동아일보는 일제강점기에 '정부를 대신하는 신문'으로 분투했다고 자부합니다. 창간 2주 만에 3·1운동 1주년 무렵의 항일독립 움직임을 보도해 첫 발매금지령을 당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말소한 보도 등으로 4회에 걸쳐 1년 7개월간 무기정간을 당했습니다. 발매 중지 63회, 압수 489회, 기사 삭제 2423회의 모진 탄압을 받다 1940년 8월 10일 강제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1923년 동아일보가 주최한 제1회 전조선여자연식정구대회는 거부장적 가치관이 엄중하던 시절에 여권(女權)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1931년에는 민족의 자주독립 역량을 키우기 위해 본격적인 문명퇴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문화가 국력의 핵심 척도인 21세기에 동아일보는 문화주의를 새롭게 심화하고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1945년 12월 광복 6달 만에 복간한 동아일보는 역사의 고비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복을 증진을 위한 언론의 소임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6·25전쟁으로 1951년 1월 10일 부산에서 간행된 속간호(續刊號)는 '이 붓대가 부러지는 날까지 다같이 뭉쳐서 침략자를 물리치고 조국의 민주통일과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미력을 다하고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 민주여론에 호소하자'고 다짐했습니다.

1960년 4·19 민주혁명의 동력(動力) 속에도 동아일보의 언론정신이 녹아있었습니다. 그해 정·부통령을 뽑는 3·15선거 때 여당이 저지른 부정을 낱알이 폭로했습니다. 마산에서 경찰의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되자 억울한 죽음을 앞장서 알렸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동아일보는 유신체

를 비판하다 정권의 광고 탄압에 의한 백지광고 사태라는 유례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국민이 '동아일보여 힘내라!'며 광고를 대신 채워주셨습니다. 1987년에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쳐 있던 특종으로 대서특필함으로써 6월 항쟁과 민주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적 정체성을 폄하하는 세력,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집단과 추종세력에 대해서는 그 불순성과 과오를 단호히 비판했습니다.

협산종령(險山峻嶺)을 넘어 90회 생일을 맞은 동아일보는 다시 웃음을 여미고 신발 끈을 조여 매고자 합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과연 국민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하겠습니다.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와 상식이 통하는 정치가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올곧은 시사비비(是非非非)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法治)를 통한 국가발전과 민생 향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발전과 민생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인 소통과 통합을 촉진하는 공론(公論)의 광장 역할을 하면서 약자와 소외계층의 기회 확대 및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동아일보는 2400만 북녘 동포의 삶에서도 눈길을 떼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관군(民官軍)이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반도 주변국과 긴밀한 신뢰 관계를 다져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화는 경제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아일보는 앞서가는 세계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보편화되고,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미디어 세계는 다양한 매체들의 융합과 재편 속에서 급속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방송저널리즘의 선구자'였던 동아방송의 신화를 재현해 대한민국 미디어의 확실한 업그레이드를 국민 앞에 실현해 보이고자 합니다. 정확한 사실 보도와 품격 높은 논평으로 동아일보의 명성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동아일보는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을 때 겨레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세상에 나온 초심(初心)을 되새기며, 국민 앞에 겸손하고 국가를 위해 더욱 고민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과학세상

한의학 '천연신약의 보고' 열려야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힘을 잃어가는 듯하다. 왜 그럴까?

먼저 서양과학과 한의학이 생산적인 형태로 접목되지 않아서다. 서양과학이나 의학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한의(약)학에 대해 무지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한의약 종사자는 현대적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최근 의과학계에서 요란하게 내세우는 시스템의학이나 홀리스틱 접근 방식이니 하는 것들이 한의학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사용된 정체관(整體觀) 혹은 항동관(恒動觀)과 매우 유사함을 아는 사람조차 많지 않다. 하늘과 인간이 서로 반응한다는 한의학 핵심 이론인 천인상응론(天人相應論)은 DNA와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현대의학의 방향과 잘 맞는다.

한의학자와 서양 의과학자의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 듯하다. 먼저 많은 한의사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못 느낀다는 사실이다. 한의대를 졸업하면 의료서비스 종사자로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어떤 한의학자는 한의약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의약품으로 개발하면 한의사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의사는 의사-약사-제조공장으로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데 특정 한의약을 의약품으로 개발하면 한의사의 시장이 잠식된다고

두려워한다. 안타깝게도 한의약을 세계의 주류 과학으로 키우려는 꿈과 능력을 동시에 가진 한의학자가 보이지 않는다.

한의약을 현대화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악리 기전의 이해, 활성물질의 파악, 원료 물질과 최종 제품의 표준화이다. 이 중 두 가지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도 한의약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현대 과학의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해결 의지만 가지면 풀릴 수 있는 숙제이다.

그간 한국의 생명공학 육성정책은 현학적인 논문은 양산했지만 산업적으로 주목할 성과는 거의 내지 못했다. 산업과 경험과 전략적 마인드가 없는 문사가 정책 기획을 주도하다 보니 유명 학술지에 논문 내는 일을 지고의 목표로 삼게 된 결과이다. 막상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의약은 옛 것, 그러므로 비과학적인 것으로 경시했다.

한의학은 인류 문명에서 큰 역할을 했던 중국 일본 인도 같은 나라에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용했던 깊이 있는 학문이며 의술이다. 단순히 서양의학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대체·보완 의학이 아니다. 한의약은 한국바이오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보루 중의 하나이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적극 도전하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진스님! 제발 그만 하십시오. 이러다가 불교 다 죽습니다

스님! 지금은 조용히 떠나야 할 때입니다.

■ 왜 신성한 종단을 정치싸움터로 만들려 하십니까?

종회에서 의결되고 총무원에서 결정된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중립질서에 따라 종단 내에서 해결 할 문제를 왜 정치권과 언론 등 외세를 끌어들이 종단을 허수아비인양 망가뜨리려 하십니까? 조계종이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종단이란 말입니까

■ 봉은사가 가난한 사찰이라면 이리 하겠습니까?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자랑스러운 호국도량인 봉은사는 개인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봉은사 신도들의 정성을 스님 개인이 장악하여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스님의 지금 행동은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폐물 행위의 죄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호국도량 천년고찰 봉은사는 절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탐진치에 빠지면서까지 스님대접을 받으시렵니까?

재가불자들도 탐진치를 버리지 못하면 부처님 뜻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스님은 오랜 수행을 하신 출가자인데 어찌 탐진치를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정령 신도만도 못한 탐진치 스님이 되시렵니까?

■ 많은 불자들이 스님의 행동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임명한 총무원과 일부 신도회장단 외에는 아무도 스님의 행동을 잘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가불자 뿐 아니라 조계종의 본사주지스님 등 대다수의 스님들께서도 명진스님의 처사를 개탄하고 계십니다. 원로스님들과 중앙 중회의원들의 뜻을 정말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 환속하여 정치에 입문하십시오.

사실을 왜곡시키고 논리를 비약시키는 망국적이고 훼손적인 수준이 가히 정치인 수준입니다. 혹여 정치적인 개인 소신이 있으시면 공언히 불교계와 스님들 오해 받게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환속하여 정치에 입문 하십시오.

■ 당분간 절에 가지 않겠습니다.

스님 같은 분이 서산/사명대사를 배출한 유서 깊은 호국도량의 주지를 하면서 종단과 스님들을 우습게보고 욕 먹이는 모양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스님 같은 분이 전하는 법을 어찌 법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이란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불자들 모두 등 돌리기 전에 조용히 자리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일

봉은사참여신도일동

참·여·단·체 | 대한민국의기독교총연합회(대불총), 중앙불교신문사, 국군예비역불자회, 상이용사불자회, 해병전우불자회, 대불총대구지회, 대불총대전지회, 대불총부산지회, 대불총인천지회, 대불총강원지회